

허경옥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소비자금융위기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류지혜

소비자금융위기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허경옥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가정교육전공

류지혜

# 認 准 書

류지혜의 석사학위논문으로 認准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취약 한데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의 신청 건수가 경제나 인구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으로 이는 개인파산 제도가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 파산 상태이나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파산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파산 규모를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신청자, 개인워크아웃 진행 등으로 분류하고, 현재의 소비자금융위기상황이 촉발된 배경과 현행 법 제도적인 구제책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소비자금융위기를 촉발 시킨 신용불량자의 급증 현상과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신용불량자의 증가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현황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둘째, 소비자 금융위기 지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위기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구제책을 보도록 한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 소비자 파산 제도의 각 특징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개인채무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 변제방안을 살펴볼 수 있다.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및 보완점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소비자 금융위기를 해결하기위한 개선방안을 교육 및 소비자 상담 등의 예방적 차원과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인 소비자파산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본다. 소비자금융 교육의 실태와 외국의 소비자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소비자금융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외국의 재무상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무상담제도의 한계와 개선점을 강구해본다.

넷째, 금융위기상황을 해결하기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소비자파산제도

에 대해 살펴본다. 세계적인 추세는 청산형절차보다는 채무자 스스로의 채무변제 계획에 의해 기본 채무를 변제하고 갱생의 길을 도모하도록 하는 갱생형 절차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소비자파산제도에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파산제도를 쉽게 이용해 재무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원제도와 파산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안해 보도록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및 방법 .....	4
II. 소비자금융위기 현황 .....	5
1. 채무 불이행 .....	5
1) 채무 불이행자의 개념과 변천과정 .....	5
2) 금융채무불이행이 미치는 영향 .....	9
3) 신용불량자의 증가원인 .....	11
4)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현황 .....	14
III. 소비자금융위기 지원제도 .....	19
1. 개인워크아웃 .....	19
1) 개념 .....	19
2) 절차 및 방법 .....	20
3) 우리나라 운영현황 .....	22
4)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선방안 .....	28
2. 개인회생제도 .....	30
1) 개념 .....	30
2) 절차 및 방법 .....	31
3)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	33
3. 소비자파산제도 .....	34
1) 소비자파산에 대한 이해 .....	34
2) 소비자파산의 주요요인 .....	35
3) 우리나라 소비자파산 현황 .....	42
4) 소비자파산 신청 절차와 방법 .....	44
5) 소비자파산의 영향 .....	47
6)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점 .....	49
4. 신용회복 지원제도 .....	58
1)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	59
2) 법적지원 프로그램 .....	62

<b>IV. 소비자 금융위기 개선방안</b> .....	<b>63</b>
1. 소비자금융 교육 .....	64
2. 소비자금융 상담 .....	6
1) 외국의 재무상담 .....	68
3. 소비자파산제도 지원 .....	68
1) 소비자파산 상담제도 .....	69
4. 개인 신용평가제도의 도입 .....	71
5.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와 정비 .....	72
<b>V. 결론 및 제언</b> .....	<b>74</b>
1. 요약 및 결론 .....	74
2. 제언 .....	76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 표 목 차

<표 1> 신용불량에 관한 변경내용 .....	8
<표 2> 신용불량자 등록 수 .....	15
<표 3> 신용불량자 증감 현황 .....	16
<표 4> 신용불량정보관리 현황 .....	17
<표 5> 신용카드관련 개인 신용불량자 현황 .....	18
<표 6> 신용회복지원 신청현황 .....	23
<표 7> 채무조정 실적 .....	24
<표 8> 연령별 신용회복 신청자 .....	24
<표 9> 소득별 신용회복 신청자 .....	25
<표 10> 부채 규모별 신용회복 신청자 .....	26
<표 11> 신용불량자 대비 개인파산자 신청 추이 .....	36
<표 12>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대책 .....	58

## 그림 목 차

<그림 1> 개인워크아웃 절차흐름도 .....	22
<그림 2> 개인 회생절차 흐름도 .....	32
<그림 3> 개인파산 면책결정자 수 .....	43
<그림 4> 소비자파산의 절차 .....	46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신용카드 연체금의 증가와 저금리 시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편중 등의 영향으로 개인 금융 부채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자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 감독 당국에 따르면 2006년 말 금융 채무 불이행자는 28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명 감소했으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 활동 인구의 11.9%에 해당하는 것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10명중 1 명이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셈이다. 정부가 2005년 ‘신용불량자’라는 용어 대신 ‘금융채무 불이행자’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중앙일보, 2006.11.19). 수년간 지속되어온 금융 채무 불이행자 문제는 소비자 파산, 자살, 가족 해체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들이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신용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적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파산 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부터 말하면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해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하고 빚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속출하며, 신용 불량자가 3백만 명을 넘어선 현실 속에서, 건강한 사회의 유지는 국가가 개인의 희생을 도와줄 경우에만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개인의 빚에 대해 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 즉, ‘도덕적 해이’로 봐서 개인 파산 제도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도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 강자인 기업이나 국가 이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데에도 큰 책임이 있다. 따라서 얼마의 빚으로 인해 빚 독촉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

으로 그 개인이 자신의 미래를 도저히 설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면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결국 개인 파산 제도는 순간의 실수로 인한 빚으로 부터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개인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6년 소비자 파산 신청 건수는 12만 2608건에 달했다. 2005년 3만 877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2002년(1335)건에 비해서는 4년 만에 무려 90배 이상 급증했지만, 미국의 110만 건, 일본의 21만 건과 비교할 때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하다. 소비자파산 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 되어 있는 사회적 최후 안전망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파산제도는 그 동안 회생보다는 청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까다로운 면책 불허가 조건의 적용 등으로 1962년 처음 파산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7년 처음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가 나올 정도로 사문화된 제도로 남아있었다. 최초로 법원에 소비자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1996년 11월 이었으며, 이후 IMF 사태를 겪으면서 소비자파산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증가하기 시작해 해마다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03년 신용 카드 위기와 경기 부진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난 2006년에는 개인파산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한국일보, 2006.11.17).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늘어나면서 법원에서는 신청 양식을 간소화하거나 심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더 많은 채무자들이 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으며, 면책을 또한 2000년 57.5%에서 2001년 67.2%, 2002년 77.3%, 2003년 89.5%, 2004년 97.6%, 2005년 98.9%, 2006년 97.9%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여 최근에는 거의 모든 파산 신청자에게 면책이 허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머니투데이, 2005.09.22).

이제까지의 소비자 파산에 대한 선행 연구는 파산 제도 자체에 대한 연구

와 법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파산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룬 연구들 역시 제도적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파산 인구가 10만 명, 빚을 갚지 못해 사실상 파산상태지만 아직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은 잠재적 파산자를 최대 120만 명으로 추산하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더욱 증가할 소비자파산 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로 방치되어있는 개인파산 문제를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병리 현상으로 간주하고 사회적인 입장에서 파산제도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중앙일보, 2006.11.20).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의 소비자금융 위기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소비자금융위기 유형을 신용불량,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소비자파산의 네 측면으로 나눠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소비자금융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사회시스템과 제도적인 보완점을 강구해 봄으로써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개인 파산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예방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외국과 우리나라의 금융 교육 환경을 비교해보고 소비자 신용 문제를 막기 위한 소비자교육 및 상담의 측면에서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금융위기에 대한 개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 2.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소비자금융위기에 관한 현황을 살펴본다. 소비자금융위기 유형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다중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신용회복지원제도와 통합 도산법 내의 개인회생제도 등 위기상황극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구제책들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 파산의 현황 및 면책 비율 등을 통해 소비자 파산 현황을 분석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소비자 파산의 주요 쟁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제시된 주요 쟁점들을 위주로 앞으로 우리 소비자 파산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또한 소비자 파산절차와의 타 제도와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것이다. 이상의 연구 절차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자료 분석, 인터넷 검색, 선진국의 사례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서적, 문헌, 법령, 판례를 비롯한 국내외 자료 및 연구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여 소비자금융위기상황의 문제와 개선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다중채무자의 유형과 원인, 다중채무자구제를 위한 관련한 법, 제도적인 정책, 선진국의 운영방안 사례, 국내외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이상에서 도출된 우리나라 파산제도의 문제점을 외국의 제도와 비교, 연구함으로써 동제도의 개선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이다.

## II. 소비자금융위기 현황

지난 IMF외환 위기이후, 경제 불황에 따른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침과 맞물린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신용카드 발급, 그리고 소비자들의 신용카드에 의존한 생활 등으로 인해 촉발된 신용대란은 가계부채의 규모를 급증시키면서 사회문제화 되었다.

### 1. 금융 채무 불이행

#### 1) 채무 불이행자의 개념과 변천과정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발생한 대금 또는 대출금의 채무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된 기일 내에 변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세원투명성 확보, 소비활성화,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염두에 둔 경기회복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각종 신용카드 장려정책이 재벌계 카드사의 무분별한 외형경쟁으로 이어져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대거 금융시장에 유입되었고, 신용카드회사 및 은행권의 가계부분으로 신용공급이 급증하였으며 연체율 상승과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2002년 5월 카드사에 대한 현금대출 업무비중을 50%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하였고, 은행연합회의 소액대출에 대한 금융 기관 간 정보공유대상 확대조치 등 갑작스런 규제강화 및 제도변경으로 은행 및 신용카드 회사들이 개인 신용 거래자를 대상으로 경쟁적으로 신용한도를 감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중 소액채무자들을 중심으로 2002년 하반기 이후 신용불량자 급증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2003년 5월 기준경제활동 인구의 1/8이상의 비

중을 차지하는 315만 명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현 신용불량자 제도 하에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제도는 없다. 미국에서 신용은 곧 생명과 같아서 신용 없이는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신용평점이 낮은 사람이 신용불량자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3개월, 30만원 연체 시' 바로 신용불량자라는 울가미가 씌워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용점수가 낮으면 대출이자와 보험료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스스로 신용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일본은 갱생을 돕는 잘 짜여진 법적 절차가 특징이며 파산제도 중 하나인 '동시폐지'제도는 5년간 분할변제를 하더라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대상이며 청산에 시간이 걸리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청과 동시에 바로 파산폐지가 된다. 영국은 설사 파산에 이르게 되더라도 3년간 파산절차를 마친 뒤 3년이 지나면 모든 기록이 삭제되어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한국은 자진변제나 신용회복 등의 정부의 일괄사면 조치를 통해 신용불량정보가 일괄 삭제되어 신용정보 공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지만 미국은 상환실적, 이행도 등에 기초한 평점에 의해 회복기준도 다르게 적용되며 불량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 (1) 일반적 개념

신용이라는 개념은 법률적으로 “사람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하며, 금융분야에서는 “신용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함으로써 물건, 또는 돈을 빌려 주거나 지불을 연기하여 주는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 신용의 수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신용불량자”란 금융기관 등에서 이러한 능력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여 신용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김옥숙, 2003)

## (2) 법제도적 개념

전국은행연합회는 2001년 1월부터 전 금융권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신용관리 규약”을 제정하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5만 원 이상 연체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관리하였으나, 2002년부터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회문제화 되면서 2005년 4월 28일부터 50만원 초과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50만원 이하 연체대출금 건수가 2건 이상일 경우로 완화되었다(한국경제, 2005,04,24).

따라서 법제도적 개념의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 및 각종 공공기관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지급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005년 4월 28일을 기해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표1> 신용불량에 관한 변경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용 어	신용불량자	연체자, 채무불이행자
연 체 기 준	30만 원 이상 3개월 연체	50만 원 이상 3개월 연체
거래가능 여부	최소 1개 금융기관에서 등록 되면 다른 금융기관 이용불가	금융기관에 따라 거래 가능
불량신용정보 보존기간	최장 2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5년	최장 1년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5년
관 리 방 식	은행연합회에 정보 집중, 일괄 관리	각 금융회사 별로 따로 관리, 신용정보회사 통해 조회
기업 등 정보 활용	수시로 정보 조회, 취업 제한 등 가능	취업 희망자 동의 조건 신용 조회 가능

(출처: 은행연합회)

### (3) 신용불량자의 범위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신용불량 정보는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정보 외에도 신용카드사 간에 상호 교환되고 있는 신용카드연체정보와 통신사업자, 유통업자, 중소기업 등이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이동통신요금 체납정보, 백화점 카드대금 연체정보, 상거래 채권 등이 있다. 2002년 7월 1일부터 신용조회업자는 신용불량정보를 등록할 수 없도록 변경되었고, 그 이전에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등록되었던 비 금융권 신용불량정보는 “거래 기록정보”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2005년 4월 28일 이후로는 신용불량자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의 관리규약에서는 신용거래정보(개설, 대출, 보증과 함께, 연체정보, 대위변제, 부도정보 등)와 금융질서문란자정보로 나뉘어져 있으며, 신용정보 조회 시 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특수 기록정보, 공공기록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로 제공된다(단, 기존의 거래기록

정보는 채무불이행정보(신용정보사)로 제공).

이전에는 개인별 연체정보가 금융거래를 하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됐지만 지금은 세금체납, 과태료 체납 등 각종 신용정보를 종합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2) 금융채무불이행이 미치는 영향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으며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책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투자부진과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인해 수많은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또한 청년실업이 심화되어 전체 신용불량자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약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고용사정악화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20대와 상위연령층대 청년실업률이 8%에 이르고 있어, 소외되는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20대의 경제고통 뿐만 아니라 경제의 하부조직이 공동화 되고 사회범죄와 빈부격차 심화로 심각한 사회·경제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내수침체로 소비가 늘지 않고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써야 할 때이다.

신용불량자는 실업, 질병, 사고 등의 이유로 연체발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인 소득이 낮은 자들로 신용불량자수가 늘어나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직장생활을 경험하지도 못한 청년, 대학생, 주부 등 신용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득보다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카드사가 신용을 공여했지만 2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실업자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가 늘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며 신용불량자로 전락되거나 그 전 단기연체 발생한 사람들도 유동성 제약으로 차입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가 진작되기란 어려

운것이 현실이다. 또한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금융기관의 고금리의 대출이자는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차입금을 늘리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하고 빈부격차를 더 고착화시키는 요소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그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정도가 심하면 부실금융 기관으로 전락하고 매각, 합병, 퇴출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된다. 대표적인 예로 LG카드의 매각, 우리카드, 국민카드의 합병 등을 들 수 있다(송성태, 2003).

### (1) 개인적 측면

신용불량자의 경우 제도금융권에서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어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기업체의 채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이 비록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잦은 빚 독촉 전화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되어 결국 퇴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계속해서 빚 독촉을 받게 되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때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기존의 인간관계를 단절하거나 대인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계속되는 빈곤은 가족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혼이나 가출로 이어지기도 하며 자살이나 범죄 충동에 사로잡혀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 (2) 경제적 측면

가계부채의 증가와 신용불량의 문제는 소비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많은 경우에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어 소비를 신장시킬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가정경제는 경제성장의 기초라 할 수 있다. 가

족 중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경제는 둔화될 것이며, 이는 다시 국가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즉 내수침체로 소비가 늘지 않으면 투자가 위축되어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그만큼 수익성과 건전성이 약화되어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그 정도가 심한 부실금융기관은 매각, 합병, 퇴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정리되게 된다.

### (3) 사회적 측면

신용불량자 문제는 강도, 살인, 절도 등의 강력범죄를 만연시키며, 이들을 이용한 부당 대출사기와 같은 파생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신용불량으로 인한 각종 범죄와 가정파탄 등은 결국 사회불안으로 작용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게 된다.

## 3) 신용불량의 증가원인

### (1) IMF 관리체제와 사회적 변화

우리나라는 IMF 관리체제 직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었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에서 들어가게 되자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고 금융기관 등에서도 퇴출과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대량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IMF 이후 임시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도 변화하였으며, 그 결과 개인의 소득에도 많은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사회적 안전장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변화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김유현, 2002).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식이나 투자 확대로 연결되지 못하여 경제는 침체되어 있는데 반해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수익을 올림으로써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시켰다(김옥숙, 2003).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관리능력 이상의 채무를 지거나, 보증을 선 개인이나,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발급해 준 금융회사, 금융회사들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은 정부, 이들 모두에게 각각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외부 탓으로 돌리려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었다.

## (2) 정부의 정책적 요인

정부는 1997년 8월 여신금융의 진입과 영업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 5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월간 이용한도(70만원)를 폐지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영업방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1999년부터 실시한 신용카드사용 권장정책은 신용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회원유치 경쟁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카드회사는 부실경영이 되었고 이는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여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축소하고 현금서비스 이용금액도 50% 이내로 제한하는 대책을 실시하였다. 그 동안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금융통을 하던 서민들은 갑자기 자금 차입처를 찾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또 다른 요인으로 신용불량자 기준의 변경을 들 수 있다. 2001년 1월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간 연체를 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게 되어 소액 연체자들이 급증하였다. 게다가 2001년 4월부터 보증총액제도가 실시되면서 금융기관 보증부로 대출을 받은 경우 보증인 요건이 강화되어 대출기간 경과 후 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연체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리고 2002년 9월부터는 500만 원 이상의 '소액대출정보 공유제도'가 시행되어 그동안 은폐되었던 다중채무자들이 노출되었다.(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 (3) 금융회사의 방만한 경영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카드모집인제도 도입, 다단계 모집, 길거리 모집, 인터넷 회원모집 등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사들은 신용 및 현금서비스 한도를 경쟁적으로 확대하였고, 복수카드 발급도 보편화 되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대학생 등에 대한 카드발급이 일반화 되어 과소비와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였다. 또한 통신회사들이 핸드폰을 청소년들에게 과다하게 제공하면서 요금연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도 속출하였다.

### (4) 법적 요인

연대보증제도는 IMF 관리체제 이후 타인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섰던 사람들이 연대하여 파산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금융회사에서 연체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제도가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대환대출이란 카드사에 밀린 연체금을 장기대출로 전환해 주어 카드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아주는 제도인데 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가족 중 한사람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을 때 대환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함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과중채무자들의 모임).

2002년 9월부터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사채업을 양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대출 시에는 66%의 금리 범위 내에서 운용하도록 최고금리를 정하고 있고,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따로 금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대부업의 경우 소액의 자금을 단기간 대출해 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본업이지만, 채무자와 채권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어 제도권 금융기관의 연체자들을 고금리 사채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

#### 4) 우리나라 신용불량자 현황

##### (1) 신용불량자의 현황

신용불량자의 수는 1998년에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1999년과 2000년에는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 12월에 3,720,031명, 2004년 4월에 3,825,188명 최고조에 달했고, 2004년 12월 말 현재는 3,615,367명에 이르게 되었다.

<표2> 신용불량자 등록 수

구분	등록건수	전월대비증가율	인원수	전월대비증가율
2002,12	9,624,900	5.67%	2,635,723	2.41%
2003,4	12,632,556	7.72%	3,086,018	4.37%
2003,7	14,067,110	3.41%	3,346,270	3.75%
2003,12	16,334,615	4.66%	3,720,031	1.98%
2004,4	17,364,170	2.06%	3,825,188	1.51%

(자료: 은행연합회)

<표3> 신용불량자 증감 현황

연령별/성별 증감현황									
구분	10대		20대		30대		40대 이상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4. 5.	1,842	1,528	372,085	354,927	719,224	467,459	1,078,873	741,381	3,737,319
2004. 6.	1,787	1,487	362,795	346,997	710,447	462,255	1,070,766	737,109	3,693,643
2004. 7.	1,727	1,452	357,256	342,427	709,867	462,689	1,081,048	743,870	3,700,336
2004. 8.	1,598	1,355	349,520	335,259	705,207	459,616	1,085,401	746,722	3,684,678
2004. 9.	1,418	1,248	341,616	328,652	699,810	456,445	1,085,667	746,303	3,661,159
2004. 10.	1,329	1,153	336,712	324,770	697,622	455,571	1,089,153	750,275	3,656,585
2004. 11.	1,195	1,046	330,750	320,552	694,996	455,090	1,092,702	753,911	3,650,242
2004. 12.	1,058	936	324,695	314,739	688,404	451,212	1,083,521	750,802	3,615,367
전월대비증감	-137	-110	-6,055	-5,813	-6,592	-3,878	-9,181	-3,109	-34,875
증감율	-11.46%	-10.52%	-1.83%	-1.81%	-0.95%	-0.85%	-0.84%	-0.41%	-0.96%
04. 11월 합계	2,241		651,302		1,150,086		1,846,613		3,650,242
04. 12월 합계	1,994		639,434		1,139,616		1,834,323		3,615,367
증감	-247		-11,868		-10,470		-12,290		-34,875
증감율	-11.02%		-1.82%		-0.91%		-0.67%		-0.96%

(자료: 은행연합회)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12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23,394,000명의 15%를 차지하며 이는 우리사회의 신용지수를 실감하게 해주는 수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들 중 20대와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779,05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신용불량자 수의 49%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향후 잠재적 성장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로 부각될 수 있어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4> 신용불량정보관리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3. 12.	2004. 11	2004. 12	전월대비 증감률
대출금	개인	5,158,546	5,492,116	5,505,518	0.24%
	법인	136,385	145,739	147,023	0.88%
카드론	개인	2,328,334	2,658,736	2,642,363	-0.62%
	법인	12	26	28	-
신용카드	개인	5,120,557	5,090,874	5,106,921	0.32%
	법인	30,065	33,252	33,841	1.77%
대위변제,대 지급	개인	2,167,013	2,496,659	2,489,526	-0.29%
	법인	118,349	118,511	118,187	-0.27%
부도	개인	117,182	96,214	92,674	-3.68%
	법인	49,029	43,154	41,571	-3.67%
금융질서문란 자	개인	13,152	12,801	12,737	-0.50%
	법인	208	217	223	2.76%
기타 주)	개인	1,429,831	1,169,062	1,153,347	-1.34%
	법인	114,013	14,826	14,080	-5.03%
합계	개인	16,334,615	17,016,462	17,003,086	-0.08%
	법인	448,061	355,725	354,953	-0.22%
인원수(법인 수)	개인	3,720,031	3,650,242	3,615,367	-0.96%
	법인	130,027	98,864	98,506	-0.36%

(자료 : 은행연합회)

주)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수 부실채권,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대지급, 가계당좌 불량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불량의 관련 형태(개인)를 살펴보면 2004년 12월 말 현재 대출금 관련 건수가 5,505,518건, 신용카드 관련 건수가 5,106,921건, 카드론 관련 건수가 2,642,363건,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 건수가 2,499,526 건으로 전체 17,003,086 건의 32%, 30%, 15%, 1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림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관련 순인원이 12월 말 현재 2,443,750명이며, 이는 전체 신용불량자 수

3,615,367 명의 67%로 나타나고 있어 신용카드가 신용불량자 수를 증가시키는 데 한 몫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은행연합회).

<표 5> 신용카드관련 개인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 명)

사 유	2004,7	8	9	10	11	12	전월대 비증감	증감비 율
카드론	1,240,122	1,227,394	1,254,212	1,256,803	1,256,856	1,241,796	-15,060	-1.198%
신용카드대금	2,210,422	2,191,989	2,161,491	2,152,317	2,142,547	2,127,226	-15,321	-0.72%
기타 (신용카드 관련 금융질서 문란자)	8,754	8,742	8,855	8,820	8,800	8,818	18	0.20%
순인원	2,499,726	2,480,071	2,461,644	2,457,081	2,451,948	2,434,750	-17,198	-0.70%

\*순인원 2,434,750 중에는 신용카드와 그 외의 사유인 대출금 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등이 중복 등록된 인원이 있을 수 있음. (2004년12월 자료: 은행연합회)

### Ⅲ. 소비자금융위기 지원제도

#### 1. 개인워크아웃

##### 1) 개념

개인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서 많은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기 전에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채무를 일부 탕감해 주고, 만기를 연장해 줌으로써 개인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신용회복복지제도라고도 하는데, 빚을 갚을 의지가 있으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할 목적으로 2002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에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사무국이 서류를 검토한 뒤 개인별로 워크아웃제도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일단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자신이 빌린 돈을 당장 갚지 않아도 되고, 빚도 줄어드는 혜택이 주어진다.

대상은 1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총 5억원 미만의 대출을 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서, 이 가운데서도 대출금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한다. 또 정기적이고 일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며, 부도나 휴업 등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경우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 행하는 개인워크아웃 외에 각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2) 절차 및 방법

### (1) 신청자격

① 신청 대상자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되었거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6호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심이위원회가 채무상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채무자로서 2곳 이상의 신용회복지원 협약가입금융기관에 총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2005년도 최저 생계비는

- 6인 가족: 1,477,800원
- 5인 가족: 1,302,918원
- 4인 가족: 1,136,332원
- 3인 가족: 907,929원
- 2인 가족: 668,504원
- 1인 독립세대: 401,466원 이다.

② 신청인의 소득 중 생활비를 공제하고 본인의 채무를 최장 8년 이내에 나누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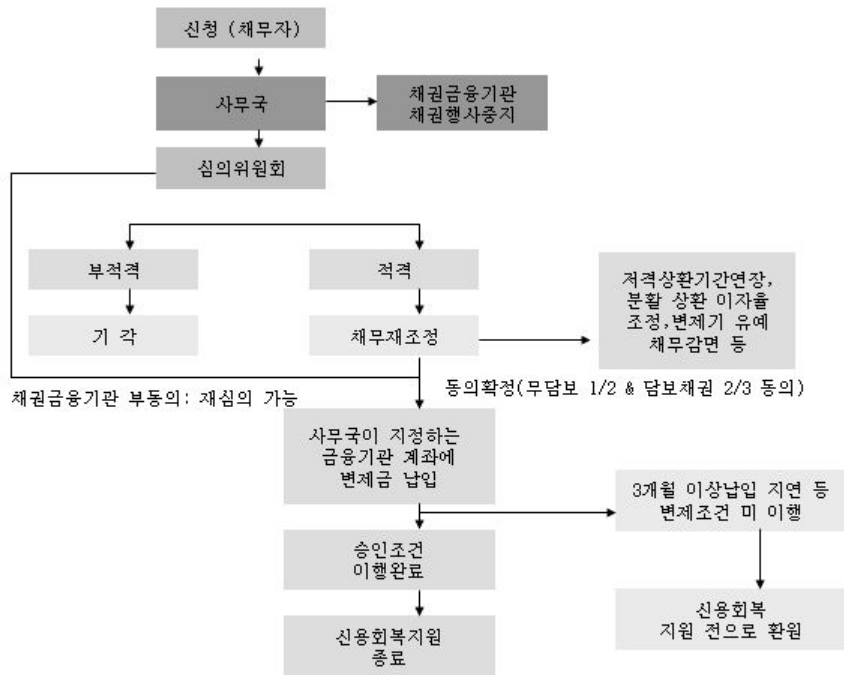
③ 채무상환을 위한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라도 부모, 형제자매 등 신청인 이외의 제 3자가 신청인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본인들의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이 된다.

### (2) 신청 및 심의절차

- ① 채무자(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가 주채권 금융회사의 자체워크아웃 절차에 의한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채권자명부, 자산부채현황표, 채무상환계획서 등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된 사무국에 신청한다.
- ② 이때부터는 채권금융회사가 보증 및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채권을 넘기는 것이 금지된다.
- ③ 사무국은 신청서류를 검토해 최고 5년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 감면과 이자율 인하 등의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심의위원회에 넘긴다.
- ④ 조정안은 무담보 채권액의 50%, 담보채권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 ⑤ 심의위원회에서 개인이 계획대로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부결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으나 채무조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한번은 조정해 줄 수 있다.

### (3) 신청서류

- ①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 ② 소득증명 서류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증명(진술)서
- ③ 주민등록 등본 및 사본 1부(2개월 이내 발급분)
- ④ 소유부동산 등기부 등본 1부(2개월 이내 발급분)
- ⑤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자동차 등록 소유자)



- 심의 위원회는 채무자의 변제계획서, 의견 등을 감안하여 채무조정안을 1개월 이내 심의 의결한 후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에 의결사항을 통지함
- 채권금융기관은 1주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심의 위원회에 통지하여 확정함. 채권금융기관 부동의 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가능

<그림 1> 개인워크아웃 절차흐름도

### 3) 우리나라 운영현황

우리나라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인연체자의 경제회생을 도와주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해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부도나 실직으로 많은 과중채무자가 발생하였으며, 신용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일반인들이 경기 침체와 금융기관의 신용한도 감축 등으로 늘어난 빚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 속속 과중채무자로 전락했으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고자 운영하고 있다.

금융기관도 과중채무자 구제를 위한 자체적인 신용회복지원 절차를 시행하고 있으나, 과중채무자의 경우에는 일부 금융기관에서 빚을 조정해 주어도 나머지 금융기관이 조정해주지 않으면 개인연체자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신용회복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꺼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 (1)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이용 현황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집계한 2005년 9월중 신용회복지원제도 신청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개인채무자는 16,555명으로 위원회 설립 이래 9월말까지 총 신청자는 509,573명, 채무조정 완료자는 471,8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신용회복지원 신청현황

(단위 : 명)

'02년	'03년	'04년	'05년						합 계
			1/4분기	2/4분기	7월	8월	9월	소계	
505	62,550	287,352	53,876	59,797	15,071	13,867	16,555	159,166	509,573

채무조정실적은 '05년 9월 중 채무조정 완료자는 13,491명으로 위원회 출범 이래 '05년 9월까지의 총 채무조정 완료자는 471,803명이다.

<표 7> 채무조정 실적

(단위 : 명, %)

'05년 8월	'05년 9월	증 감 (율)	누 계
16,068	13,491	-2,577 (-16.0)	471,803

연령별로 보면 30대 신청자가 전체의 29.3%인 4,848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신청자가 29.2%인 4,831명으로 나타나, 30~40대의 신청자가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연령별 신용회복 신청자

(단위 : 명, %)

구 분	'05년 8월	'05년 9월	증 감 (율)	누 계
29세이하	1,865 (13.4)	4,184 (25.3)	2,319 (124.3)	86,059 (16.9)
30~39세	4,964 (35.8)	4,848 (29.3)	-116 ( -2.3)	204,105 (40.0)
40~49세	4,590 (33.1)	4,831 (29.2)	241 ( 5.3)	150,281 (29.5)
50~59세	1,852 (13.4)	2,077 (12.5)	225 ( 12.1)	55,059 (10.8)
60세이상	596 ( 4.3)	615 ( 3.7)	19 ( 3.2)	14,069 ( 2.8)
합 계	13,867(100.0)	16,555(100.0)	2,688 ( 19.4)	509,573 (100.0)

주 : ( )내는 구성비임

월소득 규모별로 보면 생계형 신청자의 증가에 따라 100만 원이하 신청자가 전체의 68.1%인 11,276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였으며, 100만원초과 150만 원이하의 신청자도 25.1%를 차지하여 월소득 150만 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9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소득별 신용회복 신청자

(단위 : 명)

구 분	'05년 8월	'05년 9월	증 감 (율)	누 계
100만원이하	8,868 (63.9)	11,276 (68.1)	2,408 (27.2)	245,481 (48.2)
100만원초과~ 150만원이하	3,918 (28.2)	4,163 (25.1)	245 ( 6.3)	168,390 (33.1)
150만원초과~ 200만원이하	912 ( 6.6)	941 ( 5.7)	29 ( 3.2)	68,481 (13.4)
200만원초과~ 300만원이하	159 ( 1.2)	161 ( 1.0)	2 ( 1.3)	24,022 ( 4.7)
300만원초과	10 ( 0.1)	14 ( 0.1)	4 (40.0)	3,199 ( 0.6)
합 계	13,867(100.0 )	16,555(100.0 )	2,688 (19.4)	509,573(100.0 )

주 : ( )내는 구성비임

부채규모별로 보면 9월중 신청자의 평균 부채규모는 21,534,000원으로 전월대비 2,761,000원 감소하였다. 이는 생계형 신청자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6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10> 부채 규모별 신용회복 신청자 (단위: 명,%)

구 분	'05년 8월	'05년 9월	증 감 (율)	누 계
2천만원이하	7,467 (53.9)	9,972 (60.2)	2,505 (33.5)	167,585 (32.9)
2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2,721 (19.6)	2,817 (17.0)	96 ( 3.5)	106,155 (20.8)
3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	2,363 (17.0)	2,395 (14.5)	32 ( 1.4)	133,206 (26.2)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1,164 ( 8.4)	1,176 ( 7.1)	12 ( 1.0)	88,204 (17.3)
1억원초과	152 ( 1.1)	195 ( 1.2)	43 (28.3)	14,423 ( 2.8)
합 계	13,867(100.0)	16,555(100.0)	2,688 (19.4)	509,573(100.0)
평균부채금액	24,295천원	21,534천원	-2,761(-11.3)	

주 : ( )내는 구성비임

대법원이 22일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전국적으로 모두 3만8,828건이었고, 이중 법원의 심사를 거쳐 개시 결정을 받은 것은 2만433건,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것은 8,987건이다. 개시 결정이 이뤄지면 대부분 변제계획 인가를 받는 것을 감안하면 1년 동안 2만 여명이 개인회생제도로 채무독촉으로부터 구제받은 셈이다(한국

일보, 09.22.).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1일 개시해 이달 8일 마감한 채무 재조정 접수에 13만1천777명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추산한 대상인원(40만 명)의 33%수준이며 분야별로는 기초수급자가 8만7천164명으로 대상자의 58%가 신청,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영세 자영업자는 2만4천714명이 응해 신청률이 17%에 그쳤고 군복무자 등 청년층 신청자 수는 1만9천899명으로 20%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 5월 16일 개시한 금융권 공동추심 프로그램인 희망모아에는 이달 7일 현재 14만3천726명이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10월 개인워크아웃 등 민간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은 인원은 36만 1,104명이고 1~9월 개인회생제도 신청자 수는 3만 4,031명,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2만 3,756명인 것으로 각각 파악됐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동아일보, 11.10.)

신용회복지원 내용으로는 신용회복지원 신청대상 과중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게 되며 신용회복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8년의 기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서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도 있고, 사정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인하할 수 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채무를 완납하기 어렵고 변제 금액이 강제집행시 회수예상가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원금은 금융기관이 손실 처리한 채권에 한하여 1/2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기의 내용 이외의 기타 지원 방법을 의결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다른 신용회복지원제도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제도는 채무조정과 더불어 다중연체자에 대한 신용관리 및 신용회복에 대한 상담과 부채관리 및 소비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개설된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알선도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90,942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부채관리와 건전한 소비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신용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 군복무자,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용관리의식을 제고하기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6년 중 취업 확정자는 3,549명으로 2003년 12월 개설된 이래 2006년 12월 말까지 총 8,906명을 취업에 성공시켰다(신용회복위원회 보도자료, 2007.02.15).

시행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고, 제도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은 젊은 연령계층과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채무규모도 큰 다중연체자들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데 비해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으며 부채규모도 적은 다중연체자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진다.

#### 4) 개인워크아웃제도의 개선방안

다중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도록 하는 현행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채무자 개인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정부차원에서도 신용사면을 실시하여 열심히 노력해서 빚을 갚는 사람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최현자, 2002).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취지가 좋은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도록 협약가입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상환기간, 상환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오무영, 2002). 또한 그 동안 무분별하게 가계대출을 확대해온 은행이나 마구잡이식으로 회원을 늘여온 신용카드회사는 앞으로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이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도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감독함으로써 금융기관 스스로 위험자산을 늘리는 영업행위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박상수, 2002). 개인채무자는 "빚을 진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빚을 갚아야 한다." 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근래에 정부는 매년 신용불량자를 사면하거나 개인파산 신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먼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평생 단 한번만 허용하도록 하고, 민간 공익단체에서 실시하는 건전한 소비생활과 신용카드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과 교육을 사전에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서영경, 2002). 은행 빚은 탕감 받기 전에 변제부터 해야 한다는 사회적 의식캠페인을 전개하여 앞으로 우리경제를 떠받치고 나가야 할 20-30대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 제도의 취지 자체가 유동성 부족에 처한 개인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 경제주체의 한 사람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결코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정착하려면 개인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을 생명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기관 빚을 제때 갚은 사람에 대한 보상은 없고 오히려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거나 그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이에 역행하는 일이 많다. 그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가 계속 발생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재발하는 것은 신용정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건범, 2001). 신용관리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려면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신용불량자 정보는 없애고 신용평가의 기초가 되는 금융거래정보, 연체사실

등은 자유롭게 수집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신용평가 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홍중학, 2003).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신용평가정보(주)와 한국신용정보(주)가 개인신용정보 서비스인 ‘크레디트뷰로’ 업무를 2002년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전까지의 금융기관들은 연체 정보만을 가지고 사후적인 리스크관리를 해왔으나, 우량정보까지 제공하는 크레디트뷰로를 활용한다면 체계적인 고객들의 신용관리가 가능해진다. 금융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 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이 신용이 좋은 고객들에게 대출금리 할인혜택을 주는 등 일반인들은 신용관리에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든 금융기관이 공유하므로 서류없이 신용만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한국경제, 2001).

## 2. 개인회생제도

### 1) 개념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법원이 강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채무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이다. 변제 기간은 최하 3년,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장점으로서는 우선 원금까지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둘째로,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부채 경감액에 뚜렷한 한도가 없고 셋째,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넷째, 정해진 기간에 빚을 다 갚지 못해도 귀책사유가 없으며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채권자들로부터의 변제독촉, 급여 및 유체동산압류보류, 부동산강제경매 등의 각종 강제집행을 막는 금지·중지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채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고 60개월 동안의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고 있다. 반면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신청 후에도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며, 초기 신청비용이 많이 들며, 회생절차가 끝난 뒤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남고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목된다.

## 2)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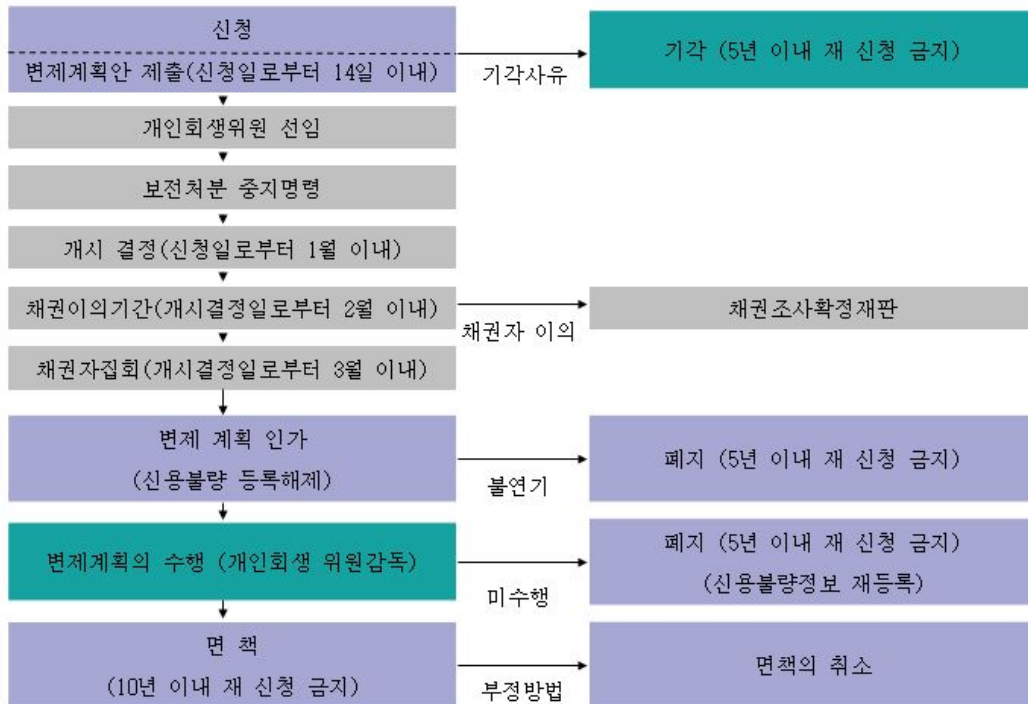
### (1)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 (2) 신청절차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

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다.



<그림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비용은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 + (5×3×3,020원) = 총 75,500원> 이 들게된다.

### 3) 개인회생제도 문제점

개인회생제도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면 채무가 법적으로 면책이 된다. 변제 계획을 변경하거나 채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여 일반인이 작성하기가 어려워 대리인을 통할 경우 신청비용이 100~200만원에 달해 채무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리고 자칫 법원의 소홀한 관리로 인해 채무자의 도덕적해이가 유발될 수 있는 점과 면책 대상이나 면책불허가대상 인가에 대한 판단의 불투명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3. 소비자파산제도

#### 1) 소비자파산에 대한 이해

##### (1) 파산의 개념

채무자(자연인, 법인 또는 상속 재산 등)가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자신의 지급능력으로는 총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 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 빠졌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으로 구성되는 파산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한 다음 총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여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꾀하는 재판상 절차를 의미한다.

파산선고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선고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파산법 96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심리하고(99조), 파산원인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을 기각하되, 파산원인이 있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의 결정을 한다. 파산은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2) 소비자파산의 개념

파산은 파산자의 지위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파산 중에서 기업자가 아닌 소비자가 채무를 더 이상 갚을 수 없게 되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진행되는 절차를 소비자 파산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임채웅, 1998). 이 경우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자기’ 파산이라는 용어도 쓰이고, 채무자가 소비자로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소비생활에서 채무를 지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소비자 파산이란 단어는

엄밀히 법률상의 의미는 아니지만, 파산제도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적, 사회적의미를 가지면서 최근 관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간의 평등한 채권 만족을 보장함으로써 공평실현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소비자 파산의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빚을 면책 받은 과중 채무자가 근로의욕을 회복해 생산적 활동에 다시 종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파산제도는 성실하나 불운함으로 인해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황금 같은 구제책이 될 수 있다(전병서, 2003).

채무자와 변제재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항구적으로 채무관계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재기나 갱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이들이 파산자라는 이유로 생계를 이어 나갈만한 일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면 결국 파산자와 그의 가족들은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해야 되게 되거나 삶에 대한 목표나 희망의 결여로 인해 동반자살, 자살, 야반도주나 가족해체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허경옥, 2000).

## 2) 소비자파산의 주요요인

### (1) 신용카드 관련문제

소비자 신용의 팽창으로 현재 충분한 자산이 없어도 장래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으로 즉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

구입 또는 용역의 구입, 현금서비스, 할부 거래가 일반화 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소비가 오히려 일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1999년부터 정부의 신용카드 권장정책이 신용카드사들의 과당 회원 유치 경쟁으로 이어져 카드모집인 제도 도입, 다단계모집, 길거리 모집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등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이 성행했으며, 신용관리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소비자에게 신용을 제공하고 신용평가 없이 다른 신용카드회사의 카드소비 확인만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복수카드 발급이 보편화 되면서 카드발급이 급증하였다.

카드회사의 경영부실 문제가 경제전반에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2002년 신용카드 이용축소와 현금서비스 한도를 제한하는 신용카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회사들이 최근 3년간 9배가량 확대하였던 현금서비스 한도를 2003년 한 해 동안 무려 42조 1천억 원이나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여러 카드 회사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아 자금유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던 서민들이 자금의 차입처를 찾지 못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단초를 제공 하였다. <표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카드 채무 불이행은 신용불량자와 다중채무자 양상의 주요원인이 되었고 신용불량자의 증가는 소비자파산의 증가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과 소비자금융의 팽창 소비자 파산을 야기 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표11> 신용불량자 대비 개인파산자 신청 추이 (단위: 명)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신용불량자(A)	1,996,000	2,084,000	2,450,000	2,636,000	3,720,000	3,615,000
개인파산(B)	505	329	672	1,335	3,856	12,317
B/A(%)	0.025	0.016	0.027	0.051	0.104	0.341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법원행정처

## (2) 경기침체의 영향

가계부실지수와 소비자 파산의 상관관계 증가추세는 선진국의 경우 가계부실이 심화될수록 소비자 파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 파산은 미국의 '과소비형 파산'보다 일본의 '불황형 파산'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송태정, 2001).

IMF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개인의 소득 증가는 미미하고, 유가 인상과 더불어 철도, 버스 등 교통요금,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고되는 반면 기업과 개인의 수입은 낮아 빈곤채무자들의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지난 상반기 중 제조업 창업이 작년보다 26% 급감해 성장 동력위축을 느끼게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제조업경기실사지수(BSI) 역시 일제히 하락했고 IT와 건설 산업, 서비스업 생산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체감경기를 더욱 위축시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소비자 심리지수마저 하락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파산신청을 급증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빚더미가 불어나고 있어 주택가격이 불안정해지거나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개신파산자가 견잡을 수 없이 늘어날 것이다(한국일보, 2006.11.19). 문제의 심각성은 올해의 우리경제가 좀처럼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데 있다. 각종 경기지표들이 적신호를 보내고 환율불안, 북핵위기, 세계경제둔화조짐 등 나라 안팎으로 곳곳이 암초투성이다. 더구나 청치권이 12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에 올인, 민생경제를 외면한다면 가계는 줄줄이 파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대전일보, 2007.01.07).

### (3) 실업, 질병의 영향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일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미국의 예를 보면 2005년 8월 말에 미국 남북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하여 파산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2005년 10월 25일자 뉴욕 타임즈는 재산심사제를 도입한 개정법이 발효되는 2005년 10월 17일 직전 무려 50만 명이 파산신청을 하였고,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도 급증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수입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기본적인 생활비나 교육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와 같은 고정 비용의 지출은 단시일 내에 줄이기 어렵다. 중산층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의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맞벌이를 하는 중산층 가정뿐만 아니라 단일소득거장의 파산도 증가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평균적인 맞벌이 가정은 한 세대전의 혼자 벌던 가정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지만, 모기지대금, 자동차 할부금, 세금, 건강보험료, 보육비를 더 지불하고 나면 한 세대전의 단일소득 가정보다 재량적 소득이 더 적고 어려운 시절에 대비해 저축할 돈도 더 적다. 여성의 소득은 자녀를 중산층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본비용으로 곧바로 투입되었고 남편이 소득을 상실할 경우나, 가장이 예기치 않은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예비소득자로서의 역할을 하던 전업주부가 일터로 나감으로써 가정의 위기가 닥쳤을 때의 안전망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단일소득 가정도 맞벌이 가정과 경쟁하여 중산층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많은 지출을 하여야 한다. (Elizabeth Warren & Amelia Warren Tyagi, 2004).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증가된 지출과 고정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와 의료보험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서 보험 등으로 대비해 두지 못

한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지출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뚜렷한 노후 대책이 없는 고령 채무자의 의료비 지출에 따른 개인 파산 증가는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전체 파산자중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년 사이에 2배가 늘었고 특히 그 주원인이 의료비 지출로 나타났다(뉴스타임, 2006.10.12). 의료비 지출도 2004년에 1.3%, 2005년에는 3.2% 그리고 2006년에는 6.8%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가는 시간도 다른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라 개인이나 국가가 미처 준비할 틈이 없다. 교육비 지출이 많은 30대, 40대 가장은 노후자금을 준비할 여력이 없으며, 이들이 60대 이상의 고령자가 되었을 경우 마땅한 소득원이 없는 상황에서 거액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병원비 지출과 관련한 노인파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국가적인 복지대책의 수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 (4) 보증채무

개인이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물론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 있어서도 물적, 인적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과 같이 물적 담보를 제출 할 수 없는 사람이나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이 그나마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연대보증이다. 이 때문에 서민의 파산이 또 다른 서민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도미노 파산이 계속되고 있다.

은행을 제외한 대출기관의 2004년 4월말 보증인 수는 334만 여명, 개인 채무 보증금액은 180조원에 이른다. 이들 비은행권 대출기관이 개인에게 대출한 총액은 218조원의 82%다. 1인당 평균 보증금액도 5,375만원으로, 2003년의 3천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대부업체까지 고

려한다면 보증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의 경우 2004년 이후 연대보증과 관련한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규모를 알 수 없지만 2003년 말 기준으로 개인 연대보증 건수는 100만여건, 총액은 6조 6천여억원이었다.

보증인은 대개 배우자, 부모나 자녀, 친지, 동창, 직장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인정주의 탓에 거절하지 못하고, 법률적이나 이성적인 고려 없이 쉽게 보증을 서주게 되는데, 채무자가 보증 채무를 갑작스럽게 이행해야하는 경우 경제적·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심지어 파산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도 많다. 2004~2005년 개인파산자 1,688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순전히 보증을 잘못 선 탓에 파산상태에 이른 사람이 조사 대상자의 6%가량이었다. 사업자금 대출 및 보증을 이유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도 30%에 이른다(한국개발연구원(KDI)). 지난 2005년 말 한국은행이 추산한 잠재 파산자 규모가 36만~120만 명인 점에 비춰 보면, 보증으로 인한 파산자 수는 몇 만 명을 훌쩍 넘어 설 수 있다.

보증제도는 순수 신용대출 관행을 정착시키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서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때 빚을 일방적으로 보증인에게 떠넘길 수 있어 신용도 조사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한겨레, 2006.10.30). 금융기관의 대출에 따른 위험은 이익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 스스로 떠맡아야 하는데, 보증은 그 위험을 보증인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이므로 이런 금융관행은 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은행들은 신용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량이나 책임부담이 큰 연대보증 대출을 크게 줄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 때문에 서민들은 오히려 은행 외의 대출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다. 비 은행권 대출기관에서도 보증에 의한 대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보증으로 인한 연쇄 파산 등의 폐해가 언제든지 재연될 위험은 여전히 크다. 따라서 보증제도가

적절히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 할 수밖에 없다.

#### (5) 도덕적 해이

소비자 파산의 주요한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겠지만, 신용카드 회사 등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파산사건의 증가가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태도변화의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개인 파산자가 연간 12만 명을 넘어서면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신용불감증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어떻게든 빚을 갚기보다는 파산선고를 통해 빚을 청산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부채를 부담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명예스럽게 느끼지 않으며 파산에 대한 치욕도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게다가 법원이 파산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와 서류를 간편하게 하고 면책 허락율을 99%까지 올리며 파산선고의 틈을 넓혀주자 편법, 불법으로 사기 파산을 부추기는 브로커들도 생겨났다. 파산 사건의 수수료도 200만원대에서 70만원대까지 낮아졌지만 채무자의 잘못된 상황과 경제적 약점을 악용한 사기도 늘고 있으며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파산제도를 악용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 후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소비자 파산의 면책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이지만, 불성실하거나 악의적인 채무자에 의하여 남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소비자 파산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첫째, 소비자 파산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절제하고 무계획적인 소비를 하는 경우와 둘째, 파산신청을 할 계획 아래 미리 대출 등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 은닉한 다음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 받는 경우, 셋째, 장래에 소득으로 변제가 가능함에도 회생형 절차를 선택하지 않고 청산형 절차로 손쉽게

게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신용정보업계의 지난해 채권 회수율은 평균 30%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파산과 달리, 소득에서 기초생활비 등을 제외한 빚을 최대 5년간 갚아가고 나머지는 탕감 받는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만 6112건으로, 2005년 4만 8541건에 비해 15%가량 증가하는데 그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서울신문, 2007.01.08).

### 3) 우리나라 소비자파산 현황

#### (1) 소비자 파산신청 및 면책건수

우리나라에서 1962년에 제도화된 소비자 파산은 1997년 첫 신청자가 나온 이래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어 오다가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로 인해 2003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들어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03년 3,856건에서 2004년 112,317건으로 3.2배 증가하였으며 2005년 12월 말까지 접수된 개인 파산신청건수는 38,773건으로 전년 대비 3.1배가 증가하는 등 높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10월 개인파산신청자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신청자는 총 7만 3,23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3만 8,773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2배 정도가 상승했다. 이와는 반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수는 2005년 이후 19만 명에서 6,000명으로 줄었다. 현재 약 400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와 수 년간 채무이행 불능의 파산상태에 있으면서 파산신청에 이르지 않은 잠재적 신용불량자의 수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소비자 파산 신청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파산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서민경제가

더욱 악화되어 채무의 증가로 이어진데다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기 위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부분 면책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3> 개인파산 면책결정자 수

증가하는 개인파산신청에 대해 법원은 대체로 생활이 힘들어 채무를 지게 된 생계형 채무자나 서업실패로 인해 채무가 늘어난 채무자에 대해서는 면책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하여 전부면책 결정을 하고 있는 경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빚을 갚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지만, 더 이상 가계부채를 방치할 경우 금융위기와 함께 경제 전반에 걸친 활기가 떨어져 그 부담은 다시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므로 최근법원의 판단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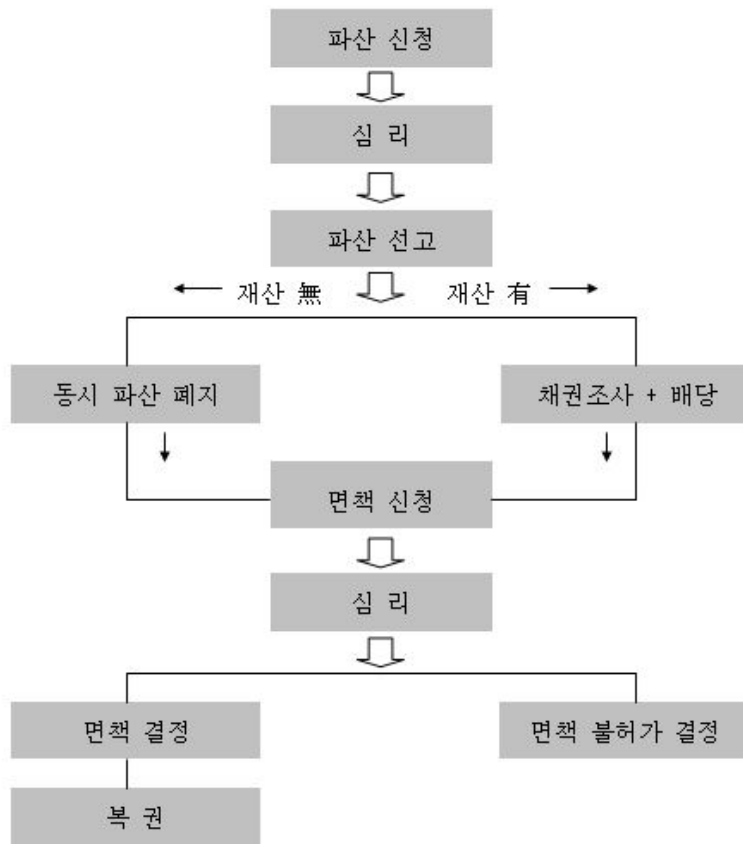
‘IMF 혼란’과 ‘신용카드 대란’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들이 많은 만큼 사회의 안정과 가정경제의 갱생으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파산 및 면책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명이 파산을 신청하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가 상당수이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이를 해결하고자 다른 가족이 보증을 서서 임시방편으로 채무변제를 연장하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가족파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개인파산신청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4) 소비자 파산신청의 절차와 방법

채권자 또는 채무자 스스로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파산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법원은 서면실미 및 심문, 채권자 및 내무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조사한 후 결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절차의 비용도 지변(支辨)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료시키는 동시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로 이행한다. 파산자는 파산절차의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언제든지 파산법원에 면책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 확정 후라도 1개월 내에 면책의 파산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다. 파산법은 일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책을 선고하도록 하고,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책제도는 성실한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에 이른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면책불허가사유와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파산 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는 일정한 채권을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을 면하게 된다(파산법 제348조). 면책결정이 확정된 파산자는 복권된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전의 상태로 돌아가 파산 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모두 없어진다(파산법 제358조 1항1호). 면책 제도를 운영함에는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소비자금융이 급격하게 발달해 왔고 신용불량자 역시 급증하고 있어 파산자 자신은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전체에서 볼 때도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므로 현재 법원의 실무는 면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보다는 파산자 본인과 가족들의 인간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파산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사회 전체적인 경제적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아 면책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도표로서 표시하면 다음<그림4> 과 같다.



<그림4> 소비자파산의 절차

면책과 복권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파산자는 그 채무를 면제받는 대신에 여러가지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우선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으며, 주식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파산법 제143조) 법원의 허락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는 주거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파산법 제137조) 면접 또는 통신의 제한도 뒤따르게

된다(파산법 제140조).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신원증명에 올라가게 됨으로써 사실상의 금융거래의 제한이나 사회적 명성의 손상과 더불어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난 후 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으려는 악덕채무자에게는 면책을 불허함으로써 평생 파산자로서의 불이익을 지고 채무를 갚아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사안에 따라 형사 처분이 가능하다.

## 5) 소비자파산의 영향

### (1) 개인적 측면

개인파산 및 신용불량자들 개인적으로는 우울증, 위장병과 같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일시에 빚을 상환하기위해 복권이나 도박 등 한탕주의에 빠져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되거나 심한경우에는 사기, 절도,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최근 거의 하루에 한건씩 나오는 사건들의 이유가 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높은 것도 관련이 있다.

또한 신용불량의 초기에는 빚 독촉 회피와 돈벌이를 위해 가족들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가족은 신용불량이 장기화 될수록 이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개인파산 신청자 5명 중 한명은 이미 파산신청 이전에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말까지 소비자파산을 신청해 면책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이혼을 한 사람이 20.5%로 나타났다(YTN, 2005.04.19). 파산경험자의 이혼비율 20.5%는 지난해 평균 이혼율 9.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여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붕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 (2) 경제적 측면

신용불량자 및 개인파산자의 증가는 금융 부실로 연결되어 국가전체의 부실을 증대시킨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불량 및 개인 파산자의 증가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연결된다. 저부부채, 기업 및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된 상황에서 가계부실까지 가세할 경우 국가경제가 총체적으로 부실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 (3) 사회적 측면

더욱이 고용사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 소득의 감소는 국민들의 지갑을 더욱 가볍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제 규모는 점차 확대돼 걸모양은 화려해 보이지만 국민들의 후생은 오히려 감소하는 ‘외화내빈’으로 경제의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격차도 사상 최대로 2007년 2월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연간 및 4.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006년 전국 가구의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은 7.64배로 통계작성 이후 최대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척도인 ‘지니계수’도 0.351을 기록해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게다가 통계청이 지난 5월 9일 발표한(2007년 1/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은 8.4배로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아 ‘소득 분배 상태’가 더욱 악화됐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도 5.95를 기록해 사실상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득과 소비가 다소 살아난다 해도 소득격차 즉 분배 상태는 ‘사상 최악’을 기록하며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 6)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점

### (1) 잠재적 파산 규모 축소를 위한 정책마련

잠재파산규모 축소를 위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상환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한 잠재파산계층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절차가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낮은 저축률로 인해 자산형성이 부진함에 따라 파산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계층의 자산축적을 유도하고 잠재파산 진입을 예방 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저소득계층을 위한 장기적립식 금융상품과 저소득 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형 투자에 세제혜택을 한 방안으로 영국의 Saiving Gateway, 미국의 개인발전 계좌(Indivisual Development Account) 와 유사한 저소득계층의 저축 및 소액금융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잠재파산 또는 파산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증분석 결과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개인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파산신청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들에 대한 신용 및 자산관리 등 다양한 경제교육이 공공차원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금융 문맹(financial illiteracy) 을 낮추기 위해 저축, 신용 및 노후자산 관리 등에 관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금융 교육실을 2002년부터 재무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등 정부의 금융 교육 강화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취약한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과 저소득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개인 파산제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생계형 파산신청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질병이나 재해, 실업과 같은 소득위험에 취약한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소득보장기능을 하는 공적연

금과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 사회보험의 빈곤층 보호기능이 취약한 상황임을 감안하되 소득충격에 대한 사적 대비수단으로써 적은 보험료로 사고나 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 상해보험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면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도덕적 해이문제

파산신청의 증가와 법원의 면책 허가율이 급증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도덕적 해이문제와 이들의 대다수를 면책시켜줌으로써 발생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개인의 낭비, 도박, 카드 돌려막기, 재산 은닉 등의 경우에는 면책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량범위를 확대해 면책허가를 해줌으로써 일단 쓰고 보자는 소비풍조가 확산되는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파산신청 이전에 각종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에 가입해 채무상환이행을 위해 노력한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반면 금융피해자들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일단 현재의 파산자 급증사태가 개인의 도덕적 채무보다는 금융기관에 쉽게 돈을 빌릴 수 없는 서민들이 IMF 이후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 쓴 고리의 대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가 고리 대출을 억제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파산과 관련, 국가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 당사자에게 개인파산은 경제적인 ‘자살’ 행위임을 인식시키는 등 가급적 사전에 개인파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 (3) 과도한 파산비용 (개인파산 절차의 간소화와 파산비용)

법원이 개인파산 활성화를 위해 신청 절차와 서류를 간편하게 하고 면책

허가율을 99%까지 올리며 문턱을 낮혀주자 개인파산이 늘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수료도 200만원대에서 70만원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채무자의 절박한 상황과 그들이 파산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경제적 약자임을 감안한다면 70만원대의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파산신청은 그 절차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까지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더 하고 있다.

#### (4) 개인의 갱생 및 채권자의 책임도 중시하는 사회적 합의 도출

다른 법 제도가 그렇듯 소비자 파산의 문제도 그 사회의 법률문화 및 가치관의 총체의 발현이다. 특히 소비자 파산제도의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를 비롯한 법률관계에 대한 그 사회의 법 감정, 소비자 보호에 관한 공동체적 합의, 그리고 사회보장의 역사적 배경 등에 관한 여러가지 기호들이 응축되어있는 제도이다(김난도, 1998). 바람직한 우리 소비자 파산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시각에 입각하여, 파산자와 파산법제에 대한 시각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파산제도의 원형을 모색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 파산법은 개인의 신용회복을 위한 갱생보다는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청산절차를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의 신성함을 생각할 때 채무를 모두면한 파산자를 복권시켜 파산에 이른 제발 불이익마저 거두어주기보다는 다소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어떻게든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거나, 면제된 채무에 상응하는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일용법적 정의 관념에 합치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지나치게 여길 경우 채권자의 대출 심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는 생계형 신용불량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의 갱생에도 초점을 맞춘 파산제 마련이 필요하다.

(5) 개인파산 요건을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한 뒤 점차 강화하는 방안 고려  
(한시적 개인 파산제 활용)

세계적으로 급격한 금융 완화기에는 개인 파산자가 속출했다는 점과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개인 파산제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제 폭 확대에 한시적으로 파산 및 면책 요건을 완화한 뒤 단계적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 현재 우리는 순 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인 실질 파산자의 구제 방안 마련 필요하나 현행 소비자 파산 제도는 명확한 규정 불비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영향으로 긍정적 효과가 간과된 채 여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6) 면책신청의 절차 및 비용 간소화 지나치게 높은 파산비용

파산신청자는 경제적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들인 만큼 경제신문 공고 등의 형식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파산 신청에서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제법 많은 시간과 돈이 들게 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은 무시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한다.

우선 파산신청에는 신청수수료 1천원과 관보게재료 7800원, 기본 송달료 2만 7천원이 든다. 여기에다 채권자 1명당 3회 송달료로 8100원을 내야하므로, 채권자가 5명일 경우 약 7-8만원이 든다. 파산선고를 받은 뒤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이 든다. 신청수수료, 관보게재료, 송달료는 파산신청 때와 똑같이 들지만, 면책심문기일, 면책결정, 면책확정을 공고하는 비용으로 60만6천원을 예납해야 한다.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변호사의 경우 파산 신청에 100만원,

면책신청에 100만원을 받고 있고, 면책 결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 비용은 우선 소득능력이 있어서 일정한 채무조정만으로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제도에서의 절차의 비용(채권자 10명 기준으로 약 15만 원 정도)과 비교해서도 과다한 편이며, 심지어 일반인이 이혼 등 일반소송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이러한 절차의 비용의 과다문제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무자들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라는 사정임을 감안할 때 파산, 면책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파산비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파산 및 면책시의 공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만 하는 대신에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의 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은 효율적인 공고의 방법일 수 있고 특히 파산 및 면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절차의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소비자 파산제도에서의 공고의 방법도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 등을 공고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파산과 면책 절차를 일원화 시켜야 한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의 이원화는 파산절차를 통한 재산의 배분절차를 하나의 독립된 절차로 뺄 필요성 등을 감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파산과 면책절차를 이원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게다가 동시폐지에서의 파산과 면책절차를 일원화하는 경우, 절차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무지 등으로 파산신청이후 면책신청을 하지 않은 채 파산자로 남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해

소할 수 있는 이점, 동시폐지 이후 채권추심 등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 (7) 무상조력 사회적 시스템 활성화

소비자 파산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가급적 무상으로 법률적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파산제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법률적 조력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공적 법률구조제도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이며, 다른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소비자단체등으로부터 법률적 조력 등을 받는 것이다. 우선 공적법률구조제도인 경우, 헌법에서 행정법의 영역까지 방대한 법률영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특정영역인 개인파산제만을 특화시켜 능동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하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CCCS(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 소비자 신용상담 서비스)처럼, 우리의 소비자단체들도 필요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활성화시키는 편이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소비자 파산절차에 필요한 상담 및 지원, 정보제공, 법률적 조력 등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 및 나아가 채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채무조정안을 만들어 주는 일, 채무자를 대리한 채권자의 중재협상,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재기를 위한 필요한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포괄해야한다.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인 소비자단체 등에 의한 개인연체자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즉,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단체의 업무규정, 등록, 분쟁조정, 보조금의 지급 등의 규정을 두어 소비자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킨 것처럼 개인연체자들의 신용회복과 경제

적, 사회적 재기를 돕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일정한 유인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8)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소비자 파산 신청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을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사채업자등에서 빌린 대출금을 못 갚겠다는 ‘개인부도’사태이며, 이는 서민경제가 피폐해져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아직 파산에 이르지 않았지만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잠재적 파산자가 40~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빚을 진 사람은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먼저 진 빚을 갚다가 최후의 순간에 파산신청을 하기 때문에 최근 늘어나는 가계대출로 집을 진 사람들이 소비자 파산 신청을 하게 된 확률이 높다. 이는 실물경기의 급강하와 심리지수 위축에서 비롯된다. 유가인상과 더불어 기업과 개인의 수익성이 낮아 한계상황에 이른 빈곤채무자들의 경제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소비자파산을 줄이려면 서민경제를 회복시켜 경기가 되살아나 실업률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경기회복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가계소득이 증대되어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이 제고 되어야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우선 일자리와 소득부진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하며, 경기활성화 위해서는 재정조기집행, 기업투자여건개선, 내수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나와야한다 (연합뉴스, 2006.11.19).

#### (9) 사회보장적 측면으로 접근

사회보장제도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파산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생계형 파산자나 저소득층 채무자에게도 매우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점에서, 채무자의 경제행위에 대해 사회 복지적, 도덕적 접근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파산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노르웨이의 경우 절박한 사회적 빈곤에 처하여 심각한 채무문제를 안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적 곤경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법을 제정하였는데,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채무문제의 해결을 사회 복지적,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는 차별된다. 채무는 변제해야 되지만 개인적 과오와 무관하게 사회적 여건 때문에 경제적 곤경에 처한 개인은 채무를 면제하여 위기상황에서 구해주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합당하다는 견해이다. 이 법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신청 당시의 보유재산과 수입을 기초로 하여 채무지불계획을 작성하고, 지불계획상 기재할 채무자의 수입은 통상 5년을 초과한 일정기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갹생에 필요한 일부의 재산은 지불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동법 제 1조 제 3항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상황이 영구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없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다면 당연히 채무를 면제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 (10) 상담제도 및 기관도입

앞으로 더욱 보편화 될 신용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면책허용 또는 불허의 이분법적 제도에서 벗어나 파산자 본인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행의 제도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 가능성의 하나가 소비자파산상담을 통하여 중장기에 걸친 부채상황계획을 마련하거나 조정을 거친 후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여겨진다(김난도, 1998).

파산상담의 유용성은 청산과 재건의 선택에 많은 유용성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상담자가 파산신청의 문지기 역할을 함으로써 증가하는 파

산신청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파산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남용되어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제도를 남용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소비자 상담제도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차산신청에 대하여 적절한 문지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산상담은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함으로써 중장기에 걸친 부채상환 계획을 마련하거나 채권자와의 조정을 거친 후 파산신청을 하도록 하면 부분별한 파산신청의 폭주를 막을 수 있으며, 고의파산 사건을 사전에 조율하고 보다 많은 채권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형식적인 상담제도가 아닌 실제로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상담자를 확보해야하고, 상담제도의 정착을 위해 상담과 사법구제가 양측으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소비자 상담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 상담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다.

#### 4. 신용회복지원 제도

본인의 관리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부채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사회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는 크게 금융감독기구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법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나눌 수 있다.

<표12> 신용불량자를 위한 구제대책

구분	금융감독기구 시행			법원 시행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Bad Bank (한마음 금융)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운영주체	각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등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법원
시행시기	2003. 3. 중	2004. 5. 20.부 터 한시적	2002. 10. 1.	2004. 9. 23.	1962. 1. 20.
대상 채권자	1개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 상 금융기관	협약가입 2개 이 상 금융기관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제한 없음 (사채 포함)
채무범위	소액 (1000만 원 이하)	5000만원 미만	3억원 이하	담보채무(10억) 무담보채무(5억)	제한 없음
대상 채무자	소액 신용불량 자	2004. 3. 10. 현 재 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파산원인 봉급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채무조정 수준	금융기관별 자체 기준	변제기간 8년 이내 원금감면은 ×	변제기간 8년 이내 원금감면은 ×	변제기간 5년 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 많을 것	청산 후 면책
법적 효력	사적 조정	사적 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면책불허가사유 없는 경우 법적 면책
신용불량 해제 여부	-	대부승인결정시 해제	신용회복지원 확정시 해제	변제계획 인가시 해제	면책결정시 해제
장점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이·신속하고 저비용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므로 홍보 및 절차안내가			-신청대상 요건이 완화됨(채무액 범위가 넓고, 사채도 포함)	

	잘 이루어짐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소비자신용 상담 및 소비자교육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음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지만 하면 원금 감면도 가능 -법적으로 면책되므로 강력
단점	-신청대상자의 요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신청 가능한 채무금액이 제한적임 -채무조정에서 원금 감면은 어렵고 분할상환·이자감면이 주요 대상이라 대상자가 한정됨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 조정이라서 한계가 있고, 금융기관 외의 사채 등에 대하여는 조정이 불가능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의 불이익, 면책불허가사유 해당여부가 불투명

(자료 : 대법원)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용회복지원, 개인워크아웃제도,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Bad Bank 프로그램 등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등 법원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사채 등 모든 채무에 대해서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아닌 채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1)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개별금융기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은 각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1) 개인워크아웃제도는 2개 이상 협약 가입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이 3억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설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2) Bad Bank는 620개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2004.5.20~11.22까지 한마을 금융에서 한시적으로 운용되었으며, 2005년5월부터 2차로 시작된 배드뱅크(희망모아)는 한마을금융의 지원 대상중 미신청 채무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3) 대환대출은 연체 후 가장 흔하게 이용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중 하나이다. 대환대출은 단지 연체 대금에 대한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형식이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연체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 일시 변제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 상환을 하면 상환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연체기간 동안의 이자가 실제 원금과 합쳐져서 대환대출 원금이 되므로 채무원금이 증가하는 폐단이 있다.

(4) 상록수 프로그램은 2001년 1월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시중 10여개 금융기관(은행은 국민, 기업, 우리, 조흥, 하나, 카드사는 국민, LG, 삼성, 신한, 외환, 현대)이 참여하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자산관리자인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다중채무를 관리하는 형식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다. 상록수 프로그램은 개인워크아웃과 유사한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상록수의 지원형태는 상록수 자체 신용회복지원과 약식 신용회복지원으로 나누어지며, 상록수 의뢰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고 비교적 감면 폭이 큰 제도 중 하나이다(인터넷).

(5) 생계형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은 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05년 3월 23일부터 11월 8일 까지 시행한 지원제도로서 소득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미취업 청년층 및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5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로 있는 경우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이자는 모두 면제 된다. 청년층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원금을

최장 2년 동안 유예하고,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확보되었을 경우 8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한다. 이자는 연체 이자는 면제되며 상환유예 기간이나 분할상환 기간 중 에 발생하는 이자는 연6% 적용한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15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원금을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장 8년간 분할 상환 하도록 한다. 연체 이자는 면제되며, 상환 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연 5%이고 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이자는 연 6%이다(신용회복위원회).

(6) 사회봉사활동 및 직업훈련을 활용한 소액 장기연체자 구제제도는 개별 금융권 별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흥은행: 지난해 12월말 기준 채무 500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 대상자 2000여명
- 하나은행: 지난해 6월 기준 500만원 미만 소액 연체자, 대상자 4500여명
- 신한은행: 지난해 6월말기준 500만원미만 소액연체자 , 대상자 700여 명
- 농협 : 2004년 6월말현재 500만 원 이하인 고객 중 농협중앙회가 선정한 고객
- 국민은행 : 국민은행 단일 채무자로서 2005. 7. 31일 현재 국민은행 연체 정보에 의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국민은행에서는 여신 잔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9만 8,955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시 채무를 감면해 주고 일정금액의 원금 상환 시 잔여원금을 감면해 주는 `KB 신용되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국민은행은 먼저 여신 잔액이 5억원 이하인 모든 채무자 중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가족의 사회봉사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해 채무 원금을 감면해 준다. 원금감면은 채무자는 시간당 2만원, 배우자 및 직계가족은 1만원이며 한도 제한은 없다. 시행기간은 2005. 09. 12 ~ 2006. 03. 31까지이다(연합뉴스,

2005.09.12).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지난해 8월부터 대출원금 500만원 이하를 갚지 못해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 선정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해오고 있다. 조흥은행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시간당 2만원, 하루 최고 16만원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의 준비속의 봉사활동은 1시간당 1만원 추가감면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1개월에 200만원씩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부실채무자로 분류된 후 원금을 우선 상환했으나 이자를 갚지 못한 고객들의 경우 4시간의 봉사활동 또는 직업훈련 수료를 하면 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채무자도 이번 제도의 대상에 포함된다.

## 2) 법원지원 프로그램

법원지원 프로그램으로써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 존재한다.

(1)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 15억 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 없이 장래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3년 내지 8년간 분할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파산제도는 도저히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다. 면책을 받아 복권이 되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데,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면책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 허가되고 있다.

(3) 2005년 9월 1일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사건에 관한예규'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개인파산과 면책이 동시에 신청될 경우 공고와 송달

을 동시에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기간 및 심리절차에서 전국적 통일적 실무를 지향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면책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함으로써 채권자들의 부당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스탁데일리, 2005.10.03).

#### IV. 소비자 금융위기 개선방안

지난 30여 년간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계들은 소득과 자산규모의 급속한 증가와 소비수준의 상승을 향유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제난국을 맞이하면서 많은 가계는 갑작스런 소득감소, 자산가치의 하락, 이자율 변동, 실업, 사업부도 등으로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IMF 구제금융 이후로 기업의 부도와 구조조정, 정부의 규모감축 등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가계부문, 특히 중산층 이하의 소비자 계층이다. 이에 따라 1995년 이후 가계부채는 연평균 13.9% 증가함과 동시에 과다채무의 문제를 낳고 있으며(최현자·성영애, 2000),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4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의 수는 368만여 명으로, 97년 말 144명의 2.5배에 달하고(서울신문, 2004.9.30), 소비자파산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많은 가계가 경제적 복지 및 안정 측면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신용불량거래자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사채 등을 이용한 뒤 고금리 연체로 인해 협박에 시달리거나 이혼, 파산 등으로 치닫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손상희, 2004). 이에 따라 신용불량 정보관리 제도의 개선이나 파산 제도의 개선 및 실정에 맞는 재정비 등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법적인 절차에 이르기 전에 소비자 신용관리 능력의 향상을 위한 재무상담 및 교육을 통하여 가계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 1. 소비자금융 교육

금융채무자 문제로 국가적인 신용위기를 겪으며 사후적인 신용회복제도의 활용과 함께 신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신용대란을 겪으며 전 국민이 신용의 중요성을 확인 하였고 신용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에 맞춰 신용교육이 다양한 대상과 각종 매체, 많은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금융교육의 부재는 사회적으로 치러야하는 비용을 심각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금융 기관들의 카드 연체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전체의 신용불량자중 10대 신용불량자는 5,448명, 20대는 무려 70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이들 중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해 보기도 전에 파산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올바른 신용교육 부재" 라고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신용교육을 통하여 금융 채무자에게는 신용관리, 부채관리,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면 신용회복을 할 수 있고, 금융채무자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일반 소비자들도 신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개인 신용 및 가계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004년도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290명의 금융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비자 신용교육의 경험, 소비자 신용교육의 요구와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금융 채무자들은 소비자 신용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용회복을 위하여 높은 소비자신용교육 요구를 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금융채무자들의 신용교육 경험은 경험이 있는 신용불량자는 전체의 2.4%, 경험이 없는 금융 채무자는 97.6%로 나타나 대부분의 금융채무자들은 신용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교육의 요구를 살

피본 결과와 비교 했을 때, 신용불량의 이유가 교육의 부재 때문은 아니지만 신용회복을 위해 신용교육요구는 높은 반면 현재 교육경험은 현저히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정부·신용기관의 신용회복제도와 같은 사후적인 신용회복과 함께 사전적으로 신용교육이 밀받침 되어야 한다. 소비자과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도 재무 및 금융 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 신용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과산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개개인이 자신의 신용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회풍토를 만드는 것이다. 금융 소비자 교육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돈의 개념과 소비가치에서부터 시작하여 신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중심으로 한 신용의 관리, 금융 정보의 평가와 활용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 능력을 향상시켜 변화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한다면, 이는 소비자 개인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금융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 교육은 몇몇 금융기관위주로만 되어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금융교육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소비자 교육의 현황은 2005년 10월, 금융감독원이 서울대 소비자학과 최현자 교수에게 의뢰해 실시한 금융 이해력 측정결과 초등학생의 금융 이해력이 중·고등학교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실과의 경제금융 교육이 거시·기업 등에 집중되어 개인의 금융생활에 관한 분야는 부족하며 이에 따라 청소년층의 금융이해력이 저하된 것으로 진단된다(금융감독원, 2005). 또한 청소년 금융 협의회가 발표한 "청소년 금융이해력 측정결과"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이 100점 만점에 45.2점을 나타냈는데 이상의 사실은 금융 교육의 부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초·중·고교의 경제교육은 전체교과의 10%도 되지 않으며 그 내용도 개념적이고 이론에 치우쳐있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

어지기 어렵다.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경제학 위주의 교육과정이 실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에 도움이 되지 못했으며,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자발적인 노력이 없는 이상 은행의 대표상품이외의 금융권상품들에 대한 개념 및 종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는 개인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가져다주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금융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소비자 교육은 금융감독원의 프로그램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월별 소비자 교육과 사후적인 의미에서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일민원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교육주체 측에서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식, 사회 각 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위한 금융 소비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이 행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우수한편이나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이 현 추세에서 교육 대상자들의 잠재적 관심을 보다 적극적인 관심으로 전화 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 있는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의 양이 부족하다는 측면이나 시장개방에 따른 금융소비의 변화방향등의 내용이 교육에서 빠져있는 등 깊이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의 금융소비자 교육 방안은 금융소비자 교육의 필요성과 해당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를 각종 미디어와 온 오프라인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의무교육과정 중 사회교과에 금융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효율적인 금융 소비,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의 특성과 금융소비에 있어서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첨가하여 생애주기 초반기에 금융소비에 대한 개념과 관심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금융 및 신용에 문제를 더 많이 겪고 있는 사회계층을 위하여 각 사회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을 설정해 금융소비에 관한 공모전과 같은 홍보의 효과와 정보 습득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활성화 시키도록 해야 한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

시켜 국가적 차원의 금융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전 국민의 금융 IQ 높이기  
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신용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주요 선진국에서 어린  
시절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지만 어려서부터의  
신용교육을 통하여 신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스로 개인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신용을 잘 관리할 수 있을 때 가계재무와 경제가 개개인의 신용  
위에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및 사회적으로 활발  
하게 소비자 신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신용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일수록 고학력·고소득  
계층에 비해 신용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신용관리에도 소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경제적 강자’는 신용관리에 더욱 철저  
한 반면 ‘경제적 약자’는 신용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상태다. 선진국  
도 신용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관리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했  
다. 우리나라도 소득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 등 경제전반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인의 신용관리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고 있다. 소득과 교육수준이 낮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는 신용에 대한 인식  
이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층 간 신용관리 양극화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  
켜 저(低)신용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  
다.

신용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다른 나라보다 잘 발달된 정보  
통신환경인 인터넷을 통한 신용교육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한 신용교육은 많은 사용자들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  
애받지 않고 신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용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소비자금융 상담

### 1) 외국의 재무상담

미국에서는 소비자 재무서비스 수요에 대하여 재무설계 서비스와 재무상담 서비스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용사회에 접어들면서 파산신청을 하는 소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재무위기에 처해있거나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가계를 대상으로 하여 군 기관, 신용기관, 기업, 사회복지기관, 성직, 결혼상담 및 가족치료기관 등에서 투자상담과 구별된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재무상담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술이나 능력향상을 위해 1992년부터 재무상담사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손상희, 2004).

## 3. 소비자파산제도 지원

### 1) 소비자파산 상담제도

우리나라에는 소비자 파산에 대한 법적 제도로서 소비자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가, 사적처리절차로서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배드뱅크제도, 생계형 신용불량자대책 등이 마련되어있다. 채무자로서는 위 각 제도의 요건, 효과, 장·단점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떤제도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제도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는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고, 부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출발 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또다시 경제적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경제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의 재정관리 능력의 부족이나 경솔하고 무절제한 생활태도에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는 재정관리에 관한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 프랑스 및 독일 등 여러 나라가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한 안이한 면책을 억제하고 채무조정제도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통한 건전한 재건을 유도하여 신용회복 및 상담기구와 법적 제도간의 보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2005년 연방도산법을 개정하여 파산납용을 방지하고 회생신청을 유도하기위해 신용상담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개인 소비자 과채무문제를 해소하기위한 절차로 과채무위원회가 우선 상담 및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원의 판결로 파산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의 경우는 채무자가 법적절차이전에 채무변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민간 및 공공 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사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 미국, 독일과 같이 법원에 파산신청 전 카운슬링을 통해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재출발하고 재정관리 능력을 갖추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돕기 위하여 소비자 상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소비자 상담 및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소비자상담 및 교육기관은 소비자 파산제도에 대한 안내 및 재정 관리에 관한 교육 뿐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상황 전반에 관한 상담을 통하여, 소비자 파산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변제계획을 수립하거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협상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산 및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소비자 상담 및 교육기관의 설립은 단시

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단 기존의 소비자 단체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법원에 설치된 민원실, 소비자 보호원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상담과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수혜 대상자는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모자·부자가정, 국내거주 북한이탈 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 민주유공자, 월평균 수입이 240만 원 이하인 자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완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사선변호인보다 절반 이하의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대전일보, 2007.01.24). 이 무료 법률서비스 중에는 2005년부터 개시한 개인회생 및 소비자 파산사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현재 41건에서 164건으로 300%나 신장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법률구조공단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가정경제가 버거운 서민들이 유료 사설변호인 대신 무료 서비스를 찾는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4. 개인신용평가제도의 도입

신용에 대한 평가 없는 무작위적인 카드발급이 신용불량자 문제를 양산하였음은 의문의 여자가 없기에 '개인신용'과 관련된 평가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 신용평가제도의 도입은 신용카드의 무작위적인 발급으로 인한 문제이외에도 '빚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즉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7월 신용회복을 신청한 5200여명의 신용불량자 가운데 9.2%가 빚보증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인데, 개인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 신용에 대한 평가만으로 대출을 받게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면 '빚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은 개인신용 평가기관에서 모든 국민들의 신용도를 관리하고 평가한다. 미국에서는 Experin, Trans Union 등 개인신용정보회사와 무디스 등 기업신용정보회사가 발달해서 연대보증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500만 엔 미만의 가계대출과 관련하여 신용이 부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독일은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동산 담보제도를 결합해서 운용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에서 개인의 전화요금 전기요금과 세금 등을 일정하게 납부했는지 여부 등의 실적을 보고 신용카드발급여부를 결정하며, 직업이나 근무연수, 은행거래실적, 소득·소비성향, 연체 등을 조사하여 신용점수로 대출기준을 결정하는 등, 철저한 신용평가로 카드발급과 대출을 해주게 된다면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금융거래나 부동산 거래는 물론 생활전반에 걸친 모든 거래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신용이 좋은 사람은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그렇게 신용사회가 정착이 된다면 '개인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해지므로 보증인 제도는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용정보의 강제집중의 필요성을 깨닫고 현행법의 기업신용평가업에 대칭되

는 개인신용평가업의 신설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정보의 강제집중을 피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5. 개인파산제도의 활성화와 정비

현행 파산제도는 보증인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규정이 전혀 없다는 점과 파산절차진행 중 강제집행을 포함한 일체의 추심행위를 자동으로 중지시켜야 함에도 너무 협소하게 규정된 점, 그리고 부부공동파산제도, 간이면책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V.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용불량, 소비자파산 등 소비자금융 위기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소비자금융위기 유형을 신용불량,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소비자파산제도의 4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개념 및 제도별 특징,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발생원인, 우리나라의 운영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각 제도간의 특성 및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들 제도의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용불량자 문제는 IMF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실업사태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그리고 금융회사의 방만한 운영과 법적인 제도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른 개인의 무분별한 소비행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정부 기관의 감독 소홀 등이 함께 빚어낸 총체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버티면 더 나은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무료 법률지원이 필요하고 담보채권인 별채권도 변제계획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소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파산제도를 적극 권장하여 그들을 신용불량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그들이 생산 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갚아 나가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달이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

했다가 가족 전체가 빚의 고리에 묶여서 결국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가 필요하다. 청소년 시기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생활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둘째, 소비자 금융위기의 구제책을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신용평가제도 도입, 소비자파산제도의 활성화와 정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개별 금융기관의 자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추진 방향으로는 잠재적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대출 금액을 완제할 수 있도록 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자력 상환 능력 범위에서 상환 기간과 이자율을 책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대다수의 정상 채무자에게 이자율 및 상환 기간 등의 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준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함은 물론 대 고객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30대 청년 신용불량자가 일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자체 또는 거대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전문상담기구를 설치하여 채무자들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제도가 무엇인지 추천하고, 합리적인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제책들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개선방안은 일단 소비자 교육 및 상담의 측면과 법적인 절차인 소비자 파산제도로 구분되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제언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교육을 위한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자교육은 양적인면에서도 부족한 실정이다. 지속적으로 관련내용을 접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시간이 요구되는 가치관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일찍부터 소비자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경제적인 마인드를 길러주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소비자교육의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소비자교육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는 소비자 금융 상담제도가 전문상담사, 상담 기관의 부족으로 인하여 효과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개설하거나 보충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소비자파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도적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소비자파산이 급증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소비자파산 이용현황은 현저히 떨어진다.

## 참고문헌

- 김난도(1998).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파산상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45-263.
- 김대익(2002). 외국의 개인워크아웃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금융통권, 58, 19-24.
- 김대익(2002). 소비자파산의 현황과 대응, 하나경제리포트, 140, 26-31.
- 김동환(2002).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의미와 개선방향, KIF금융논단, 175-179.
- 김영목(2000). 소비자파산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배(2002). 신용카드가 사람을 잡는다: 한겨레21, 395, 54-55
- 김옥숙(2004). 우리나라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현(2006). 개인파산 신청 급증 : '빛의 수렁' 마지막 비상구 : 공적 채무조정 효과 인식에 비용 부담 줄어 채무자들 신청 줄어. 주간한국, 2121, 60-61.
- 김종호(1999). 소비자파산의 모든 것, 청림출판.
- 朴承斗(2004).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기본구조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16, 181-210.
- 배미경(2004). 신용불량자의 현황분석 및 증가요인에 따른 정책제언, 경영경제, 37(1), 107-130.
- 서경환(2005). 개인회생제도, BFL : Business finance law. 9, 51-60.
- 소종섭(2007). 개인 파산 가족 파산 고령 파산 절망의 도미노 : 개인 파산자 10만명 시대가 되었다. 시사저널, 898, 24-28.

- 손상희(2004). 미국의 소비자재무상담 서비스 연구, 소비문화연구, 7(4) 101-126.
- 심병연(1999). (새로운 출발을 위한)소비자파산을 아십니까, 서울 : 향영 21C 리스크컨설팅.
- 손현덕외(). 『금융 IQ를 높이자』, 서울 : (주) 북21 을파소.
- 양형우(1998). 소비자파산과 잔여채무의 면책제도: 독일통합파산법(InsO)을 중심으로, 比較私法, 9, 249-284.
- 오수근(2004). 알기 쉬운 개인회생절차,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유경원(2005). 최근의 개인파산 급증현상과 정책과제, 금융경제연구. 239, 1-50.
- 유경원(2006). 우리나라 개인파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경제분석, 12(3)
- 李炳華(2002). 『파산법 이해』 서울 : 삼우사.
- 이상영(2002). 소비자파산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 比較私法, 9(4), 63-93.
- 李商永(2001). 소비자파산제도의 국제동향과 사회제도적 조망.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IV, 525-554.
- 이재광(2004). "중산층에도 못 낀다" 적자 가계 급증 : 의사·변호사도 개인파산 속출..."소득 줄어 지갑 닫는다" 악순환 우려: 중산층 붕괴 조짐, 이코노미스트, 746, 22-23.
- 이치영(1998). 소비자파산의 현상과 과., 消費者問題研究, 21, 75-105.
- 田炳西(2002). 消費者破産法の 方向,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5, 406-444.
- 임철순(2003). 소비자회생제도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삼우사.
- 장종운(2006). (사례중심)개인파산사건 처리실무: 개인파산·개인회생 :서식, 사례. 법률정보센타.

- 田炳西(1999). 파산법, 서울 : 韓國司法行政學會.
- 주선아(2006). 소비자파산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朱宣俄(2006). 통합도산법에서 소비자파산제도의 내용과 개선방향, 法曹, 55(5), 596, 131-173.
- 최현자(2002). 개인회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신용카드, 22, 70-86.
- 한기석(2005). 소비자파산의 법정책적 검토: 현황과 개선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병탁(2005). 미국 연방파산법상 소비자파산의 면책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준범(2003). 개인파산의 양태와 가정해체 :개인파산의 실태, 두레사상, 7, 20-33.
- 허경옥(1999). 우리나라 소비자파산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한 고찰, 소비자학 연구, 10(3), 1-21.

## ABSTRACT

Ryu Ji Hye

Dept. of home econom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ough Korea's household debt is not in good condition, compared to major developed countries, the number of filling for individual bankruptcy is quite low for the volume of the economy and population. This means that individual bankruptcy policy is limitedly used and there are a lot of actual bankrupt states and potential bankrupts who did not submit bankruptcy petitions. This paper classifies Korea's potential bankrupts as credit delinquents, applicants for credit restoration and progress of individual workout, surveys the situation that triggered current finance crisis of customers and a remedy by current law and tries to find improvement. Therefore, followings are subjects that should be discussed in the paper.

First, a sudden increase of credit delinquents which provoke finance crisis of customers, its social impacts and reason for increasing credit delinquents should be inspected and through the Korea's state

of credit delinquents seriousness and countermeasure of the problem should be considered.

Second, a remedy system for financial crisis is checked by looking at the credit recovery program. Its individual features and differences of individual workout, individual credit restoration system and customer bankrupt system are illustrated. Individual debtors can find the reasonable ways to repay the debts and problems and supplements to the current system are figured out to draw the improvements.

Last, the improvements to solve customers' financial crisis are largely divided into preventive way such as education and customer counseling and ultimate way of legal financial bankrupt. Investigating the actual education conditions of customer finance in Korea and processes of customer counseling in other countries, the direction of Korea's education and counseling about customer finance can be suggested. And the global trend of customer bankruptcy system as an ultimate way is changing from the process of clearing up debts into the process of the revival, which encourages debtors to pay off existing debts by their own plans of repayment and to find out ways of recovery. Considering this fact, it should be needed that more people can easily use customer bankruptcy system to solve their financial crisis.